

공 개



의안번호	제 333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9. 23. (제 17 차)

의
결
사
항

신한카드(주) 외 4개 카드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9. 23.

1. 의결주문

신한카드(주) 외 4개 카드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한카드(주) 외 4개 카드사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신한카드(주) 외 4개 카드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류를 통하여 심사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한 결과, 서비스의 혁신성,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등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신한카드(주) 외 4개 카드사에 대해 지정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참조

나. 제6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필(2020.9.21.)

(별지)

신한카드(주)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한카드(주)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다 음 －

1. 상 호 : 신한카드 주식회사

2.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범위

- 카드사가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

3.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대상

-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고자 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

4.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

- 고객이 카드사에 송금을 신청하고 대금을 지급

5. 규제특례 대상 금융관련법령

-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에서 취득한 보수 또는 소득 등의 범위 내에서 취득경위 입증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 가능
 - 단, 연간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는 취득경위 입증 서류 제출 없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 가능

⇒ 카드사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 대상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도록 하는 동조항을 지정된 '카드사'를 통해서도 지급가능하도록 예외 적용 필요

6. 부가조건

- 카드사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소액해외송금을 위해 지정한 카드사 현황을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한국은행에 보고

7. 지정일 : 2020. 9. 23.

8.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별지)

(주)우리카드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주)우리카드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다 음 －

1. 상 호 : (주)우리카드

2.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범위

- 카드사가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

3.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대상

-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고자 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

4.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

- 고객이 카드사에 송금을 신청하고 대금을 지급

5. 규제특례 대상 금융관련법령

-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에서 취득한 보수 또는 소득 등의 범위 내에서 취득경위 입증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 가능
 - 단, 연간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는 취득경위 입증 서류 제출 없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 가능

⇒ 카드사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 대상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도록 하는 동조항을 지정된 '카드사'를 통해서도 지급가능하도록 예외 적용 필요

6. 부가조건

- 카드사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소액해외송금을 위해 지정한 카드사 현황을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한국은행에 보고

7. 지정일 : 2020. 9. 23.

8.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별지)

하나카드(주)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하나카드(주)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다 음 －

1. 상 호 : 하나카드(주)

2.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범위

- 카드사가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

3.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대상

-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고자 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

4.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

- 고객이 카드사에 송금을 신청하고 대금을 지급

5. 규제특례 대상 금융관련법령

-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에서 취득한 보수 또는 소득 등의 범위 내에서 취득경위 입증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 가능
 - 단, 연간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는 취득경위 입증 서류 제출 없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 가능

⇒ 카드사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 대상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도록 하는 동조항을 지정된 '카드사'를 통해서도 지급가능하도록 예외 적용 필요

6. 부가조건

- 카드사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소액해외송금을 위해 지정한 카드사 현황을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한국은행에 보고

7. 지정일 : 2020. 9. 23.

8.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별지)

(주)KB국민카드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주)KB국민카드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다 음 －

1. 상 호 : (주)KB국민카드

2.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범위

- 카드사가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

3.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대상

-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고자 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

4.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

- 고객이 카드사에 송금을 신청하고 대금을 지급

5. 규제특례 대상 금융관련법령

-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에서 취득한 보수 또는 소득 등의 범위 내에서 취득경위 입증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 가능
 - 단, 연간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는 취득경위 입증 서류 제출 없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 가능

⇒ 카드사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 대상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도록 하는 동조항을 지정된 '카드사'를 통해서도 지급가능하도록 예외 적용 필요

6. 부가조건

- 카드사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소액해외송금을 위해 지정한 카드사 현황을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한국은행에 보고

7. 지정일 : 2020. 9. 23.

8.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별지)

롯데카드(주)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롯데카드(주)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다 음 －

1. 상 호 : 롯데카드(주)

2.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범위

- 카드사가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

3.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대상

-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고자 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

4.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

- 고객이 카드사에 송금을 신청하고 대금을 지급

5. 규제특례 대상 금융관련법령

-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에서 취득한 보수 또는 소득 등의 범위 내에서 취득경위 입증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 가능
 - 단, 연간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는 취득경위 입증 서류 제출 없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 가능

⇒ 카드사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 대상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도록 하는 동조항을 지정된 '카드사'를 통해서도 지급가능하도록 예외 적용 필요

6. 부가조건

- 카드사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소액해외송금을 위해 지정한 카드사 현황을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한국은행에 보고

7. 지정일 : 2020. 9. 23.

8.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별첨)

관 계 법 규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하 "관련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에 관한 사항
3.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에 관한 사항
4. 자료제출, 검사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금융관련법령 중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등 규제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
6.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지정을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자는 대상 서비스의 변경, 서비스의 추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금융위원회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변경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혁신금융사업자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
2.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의 회사

②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금융 서비스별 또는 신청 회차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신청서 검토 결과 미비사항이 발견되거나 소명이 부족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관련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혁신금융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4. 혁신금융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혁신금융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받지 않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또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7. 혁신금융서비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3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③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또는 기술·금융 관련 연구소에서 7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기술·금융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서 7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법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비자보호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심사한다.

1.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여부
2. 해당 금융서비스가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3. 해당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4. 이 법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 없이도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특례를 적용할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5. 신청자가 해당 금융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6.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이 구체적이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지 여부
 7. 다음 각 목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이 충분한지 여부
 - 가. 이용자의 범위 또는 이용자 수, 건별 거래 금액의 한도, 고객별 거래 횟수 등에 대한 제한 방안
 - 나.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 고지 및 동의 수령 방안
 - 다. 제28조에 따른 분쟁 처리 및 조정 방안
 - 라. 지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 마.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 바. 지정기간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 사.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8. 해당 금융서비스로 인하여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
 9. 해당 금융서비스가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
- 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에 법령의 제·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①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허가·등록·신고, 사업자의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와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 중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재산, 개인정보 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상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지급) ① 제4-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이하 "취득경위 입증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 외국환은행 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령 또는 휴대수입한 대외지급수단 범위 이내의 경우.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최근 입국일 이후 수령 또는 휴대수입한 대외지급수단에 한한다.

2.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한 범위 이내의 경우

3. 국내에서의 고용, 근무에 따라 취득한 국내보수 또는 자유업 영위에 따른 소득 및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및 보장급부 또는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범위 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국만기보험 수령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주한 외교기관이 징수한 영사수입 기타 수수료의 지급

5.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실적 범위내의 지급

6. 제2-3조제4항 단서규정에서 정한 비거주자의 지급

7. 기타 제7장 내지 제9장의 규정에 따라 대외지급이 인정된 자금의 지급

②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등은 연간 미화 5만불(제4-5조제6항단서규정의 금액을 포함한다) 범위 내에서 제1항제3호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

③비거주자와 외국인거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3조제1항제2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외화

2. 외국인거주자의 미화 1만불 이내의 해외여행경비 지급

3. 외국인거주자가 제1항3호에 해당하는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영 제14조 3호에 따른 체신관서를 통하여 지급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재부
소관부서	외환제도과
연 락 처	044-215-4750